

[ **종합·해설** ]

# 李-朴 검증 공방 ‘접입가경’

### 朴 “李 전 시장이 BBK 명함 돌린 것 확인”

### 李 “전형적 김대업 수법… 법적 대응 불가”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전이 접입 가경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겨냥한 박근혜 전 대표 측의 검증 공세가 날로 거세지고 있고, 여기에 이 전 시장 측은 ‘법적 대응’ 불사로 맞서면서 창과 방패의 불꽃튀는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박 전 대표 측은 투자운용회사인 BBK와 이 전 시장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집중 공세를 펼 반면, 이 전 시장 측은 전남 광성문 의원의 ‘X 파일’ 언급이 “완전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 측=최경환 의원은 6일 “이 전 시장 측이 99년 4월에 미국에 있어서 BBK에 투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요즘 외국에 나가 있어 투자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공격했다.

최 의원은 또 “지난 2000년 10월 이 전 시장이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외국인 큰 돈을 확보했다. 첫째부터 수익을 내겠다’고 자랑한 내용이 있는데 이를 이 전시장 측이 오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인터뷰 기사를 오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 전 시장이 BBK와 관련된 명함을 돌린 것이 확인됐다”며 “왜 아무 관련없는 회사의 명함을 만들어 갖고 다니느냐. 미래제휴사 개념의 명함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보자가 전한 것이라며 명함 사본을 공개했다. 그 명함에는 미

#### ■박근혜-이명박 검증 4대쟁점 입장

박근혜 측	쟁점	이명박 측
참여정부 이전 정권 때 시장 선거에 쓴다고 만든 것을 범여권 주자가 갖고 있다.	이명박 X파일	허위사실 유포, 이 후보 상체내거위헌 '제2의 김대업 사건'
이 전 시장이 신고된 재산 외 친인척 18~19명 명의의 8~9천억원 신탁재산 존재.	이 전 시장 신탁재산	현대건설 근무시 성과급을 명으로 지급받은 사실 있지만 명의신탁 등으로 명 소유 없음.
이 전 시장이 사실상 BBK 공동 대표.	BBK-李 관계	BBK의 발기인이거나 임원이었던적도 없고, 단 한 주의 주식도 취득한 사실이 없음.
대운하 등 공약사항을 가려 국면전환 위해 이 측에서 스스로 공개한 자적극.	검증공방 박 전 대표 연루설	박 전 대표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주요한 사안이 논의되기 어려움, 박 전 대표 입장표명 요구

국에서 한국어로 곁말 쓰는 ‘82-2’로 시작되는 전화번호가 자필로 적혀 있었고, 최 의원은 “이 전 시장의 필체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 전 시장 측=이 전 시장 캠프는 이날 휴일임에도 핵심 참모들을 소집, 장시간 대책회의를 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숙의했다.

특히 박 전 대표 측에서 이 전 시장이 금융사기에 연루된 투자운용사 BBK의 공동발기인이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전형적인 김대업 수법”으로 규정했다.

이 전 시장 본인은 법적 대응 방침

에 다소 부정적이긴 하지만 측근들은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인식 하에 법적인 조치도 필요하다는 입장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준 캠프 대변인은 “이 전 시장이 BBK 공동발기인이었다는 주장은 BBK의 정관 자체가 조작된 것이므로 허위 사실”이라며 “검찰과 금감위 등에서 이미 허위로 결론난 사실을 갖고 같은 당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스스로 원칙과 신뢰를 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광근 공동대변인은 박 전 대표에 대해 5개 항의 공개 질 의서를 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현충일인 6일 전쟁기념관을 방문. 어린이들과 경례를 나누고 있다(왼쪽). 박근혜 전 대표가 6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북한 핵폐기·자유민주통일 6·6 국민대회’에 참석, 한 퇴역 장성과 악수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가 6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북한 핵폐기·자유민주통일 6·6 국민대회’에 참석, 한 퇴역 장성과 악수하고 있다.

## 기자 출신... 94년 박 전 대표와 인연

‘후 X파일’ 주장 광성문 의원은 MBC 기자, 워싱턴 특파원, MBC-ESPN 사장 등을 지낸 언론인 출신으로 MBC 편집부장이던 1994년 고 육영수 여사 서거 20주년 특집 방송을 하면서 은둔생활을 하던 박 전 대표와 40분간 인터뷰를 해 화제가 됐다. 그로 인해 박 전 대표와 인연을 맺은 뒤 지난해 말 캠프 출범 때부터 박 전 대표를 도와 왔다.

회식자리에서는 박 전 대표의 폭탄주를 대신 마셔주는 ‘흑기사’의 일원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 일가의 재산이 8천억원이 넘고 재산과 관련된 ‘X 파일’이 있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한 박근혜 전 대표측의 광성문 의원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래(7일)쯤 X 파일 존재에 대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보좌관은 7일 회견 여부에 대해 “지금 분위기가 안하심 것 같다.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고 했다.

## 인명진 윤리위원장 “해당행위 제명 가능”

“공방 관련자 윤리위 회부”

한나라당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6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측 간의 검증공방에 대해 “계속 되던 공방 관련자들을 직권으로 윤리위에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박 전 대표측 광성문 의원이 이 전 시장 차명재산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측 정두언 의원이 ‘총선 출마 불가상황’을 언급한 데 대해 “모두 당을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인 위원장은 광 의원이 이 전 시장의 차명재산과 관련, 구체적 근거를 제시할 것이라고 한때 알려지는데 대해 “상황이 겹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다”면서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징계의 범위와 관련, “당에서 조사를 거친 뒤 결정할 일이지 명백한 해당행위로 인정될 경우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까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공방 관련자 윤리위 회부”

한나라당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6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측 간의 검증공방에 대해 “계속 되던 공방 관련자들을 직권으로 윤리위에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박 전 대표측 광성문 의원이 이 전 시장 차명재산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측 정두언 의원이 ‘총선 출마 불가상황’을 언급한 데 대해 “모두 당을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인 위원장은 광 의원이 이 전 시장의 차명재산과 관련, 구체적 근거를 제시할 것이라고 한때 알려지는데 대해 “상황이 겹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다”면서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징계의 범위와 관련, “당에서 조사를 거친 뒤 결정할 일이지 명백한 해당행위로 인정될 경우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까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박상천, ‘배제론’ 사실상 철회

### “통합민주당 기본원칙 새로 설정”...범여 대통합 활로 열려

박상천 민주당 대표가 6일 범여권 대통합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특정세력 배제론’을 사실상 철회함에 따라 범여권 대통합에 활로가 확보됐다.

지난 4일 합당선언 이후 특정세력 배제론 고수 입장을 밝혔던 박 대표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중도통합민주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이 출범하게 되면 민주당의 기존 원칙과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며 “새 정당의 통합 원칙과 기준은 양당간의 기본합의서를 근거로 논의, 새로 설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세력 배제론이 민주당의 일관된 당론이었지만 ‘통합민주당’이 창당될 경우 민주당의 기존 당론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으로 사실상 배제론 철회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같은 박 대표의 입장 변화는 민주당 내부의 사정과 외부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

다.

열린우리당 등 범여권에서 통합민주당 창당과 관련, 특정세력 배제론 및 이면 합의 등을 거론하며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내면서 창당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 측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통합민주당 합류가 거론됐던 무소속 및 열린우리당 2차 탈당파들도 여론의 동향을 보며 추종하는 양상을 나타내면서 추가 영입작업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통합민주당 창당 선언 직후, 적어도 10명 정도의 의원이 합류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유선호 의원 1명만이 합류하는데 그쳤다. 특히, 합당의 파트너인 김한길 중도 통합민주당 대표의 압력이 한 요인으로 꼽힌다.

김 대표는 5일 오후 박 대표에게 배제론 철회라는 공식 입장을 6일까지 표명하지 않을 경우 합당선언을 무효

화할 수 있다는 의중을 민주당 측에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민주당 측 관계자는 “범여권 대통합은 국민적 요구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배제론을 고수한다면 결과적으로 통합민주당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도 이같은 사정을 고려한 끝에 배제론을 철회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박 대표의 배제론은 상당한 궁지에 몰린 것으로 관측됐다. 장상 전 대표 등을 중심으로 한 대통합파가 서명에 나선데다 일부 현역의원들도 소통합 및 배제론에 대한 반발 움직임을 접지 않으면서 박 전 대표의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박상천 민주당 대표의 배제론 철회에 대해 범여권은 반신반의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질적인 대통합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김근태 ‘역배제론’ 논란

### “노대통령·박상천 그룹 제외” 주장에 친노성향 “친노배제는 대통합 기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대규모 집단 탈당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당 내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 박상천 대표가 중심이 된 그룹을 대통합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야한다는 이른바 ‘역(逆)배제론’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불씨는 탈당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김근태 전 의장이 5일 원내에서 열린 통합범영미래구상 초청 강연 원고를 통해 노 대통령과 박 대표를 겨냥해 “두 분은 각자 정당을 만들어 후보단일화를 하자고 주장한

다”며 노 대통령과 박 대표가 중심이 된 그룹을 당장 대통합에 참여시키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폈다.

김 전 의장의 발언은 큰 진통이 예상되는 후보단일화보다는 오픈 프라임(완전국민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나온 것이지만, 우리당내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역배제론’은 특히 김근태·문화상·정동영 전 의장이 5일 ‘제3차대’ 형성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40여명 규모의 의원들이 내주초

이후 집단탈당을 추진한다는 설이 유력하게 흘러나오면서 자칫 소수파로 남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 친노의원들을 자극했다.

친노성향인 김형주 의원은 6일 “탈당도 통합의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친노 몇 사람을 두고가는 식으로 탈당이 이루어진다면 문제”라며 “만약 대규모 탈당이 이뤄지면서 당에 남는 친노와 비례대표 50여명에 대한 배제 얘기가 나온다면 이런 식의 대통합은 기만적인 행위이며 반대한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 참평포럼 ‘정부비판 반박논리’ 매뉴얼 배포

“정부정책의 성패는 지표로 말해야 한다. 근거 없는 참여정부 무능론은 폐기돼야 한다.”

참여정부평가포럼(참평포럼)은 5일부터 시작된 시민정책교실 강연을 계기로 참여정부 비판 담론에 대한 반박자료를 담은 매뉴얼을 마련, 시민정책교실에 참가한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참여정부 무능론, 위

원회 공화국론, 편 가르기 정권론 등 지금까지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제기한 비판 담론을 소개한 뒤 구체적인 지표와 성과를 소상히 소개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참여정부 무능론에 대해 2002년 말과 비교한 경제지표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참여정부가 무능하지 않았고, 향만인력 공급체계 개

선,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용산미군기지 이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등 할 일은 다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 ▲위원회 공화국론→“부처의 벽을 허물고 통합적 정책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 ▲게이트 정권론→“밝혀진 권력형 비리가 단 한 건도 없다” ▲편 가르기 정권론→“소외계층의 목소리가 제대로 높아진 것” ▲경제포기론→“노무현 대통령은 경제대통령” ▲무기력한 공권력론→“불법 시위 감소”라고 각각 반대 논거를 제시했다.

/연합뉴스